국가전략연구위원회 이슈브리핑 35호 (발간일: 2025. 8. 29.)

트럼프 2기 대중국 외교정책과 사이버 안보정책에의 영향 – Strategic Decoupling, Peace Through Strength and Cybersecurity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1. 트럼프 2기 대중국 외교의 혼란과 불확실성, 그리고 사이버 안보의 몇 가지 모순

"Winning the Race vs. Self-defeating in Cyberspace"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4개월여의 모습은 그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정부 내 다양한 그룹들에서 혼란스러운, 모순되는 시그널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트럼프 2기 미중 기술경쟁 전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혼란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트럼프 2기 대선캠프의 구호들- "미중 경쟁에서의 승리" "미국우선주의" "관료주의(deep state) 해체" 등-은 설계부터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가면서 실제 목표

가, 그리고 방향이 무엇인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구조에 있다.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 2기 초기가 동맹 공세, '관료주의(deep state)' 해체와 DOGE의 정부효율성 정책에 따른 국무부 국방부 등의 조직개편, 인력감축 등이 이어지면서 미중관계와 사이버 안보 전략의 향방을 분석할 수 있는 본격적인 정책의 내용들은 아직 제한적이다. 중국을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중 경쟁의 승리(winning the race)를 강조했던 트럼프 2기의 원대한 목표는 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모순된 목표들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원대한 목표와 역량의 위기, 규범의 위기, 연대의 위기가 트럼프 2기 초반의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Winning the Race with China

2024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헤리티지재단이 준비한 정권인수보고서인 프로젝트 2025 『리더십을 위한 명령(Mandate for Leadership)』의 '정보개혁(intelligence reform)'에 대한 장은 트럼프 2기의 정보정책 우선순위와 조치들을 시사하고 있다. 정치화, 중국, CIA의 미래, 기술, 그리고 국가정보국(ODNI)을 통한 중앙집권화라는 다섯 가지 일관된 주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2기는 정부의 정책적 중점과 자원을 대중국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헤리티지 보고서는 정보기관 개혁에서도 중국에 초점을 둔 방향을 제시하고, 중국공산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이 "전정부적 접근(whole of government approach)"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트럼프 1기 국가정보국은 중국 관련 정보예산을 20% 늘린 바 있다. 이렇듯 트럼프 2기에서 중국은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되면서 강도 높은 대중국 견제정책이 전개되면서 미중 경쟁과 긴장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elf-Defeating in cyberspace

그러나, 이러한 대중국 승리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임기 초반 조치들은 사이버 안보 역량과 방향에 대한 도전들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2기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사이버안보와 인프라안보국(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CISA)의 예산을 전년 대비 4억9천1백만 달러(17%, 약 7천억원) 삭감하였다. 백악관은 CISA 예산의 삭감 배경으로 무기화와 낭비를 근절하겠다는 것을 들었다. CISA 핵심 임무 중 허위 정보 및 선전에 집중하는 프로그램과 국제 업무와 같은 외부 참여 부서를 폐지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과 부서들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는 검열 산업 단지의 허브로 활용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주 및 연방차원에서 기존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서들을 폐지하

고, 연방 네트워크 방어 및 중요 인프라의 보안 및 복원력 강화에 다시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산 삭감 뿐만 아니라 사이버안보 담당 고위직원들을 포함한 대규모 인력감축이 진행되면서 실제 사이버 안보 역량 우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부 인력 감축 기조에 따라 미국국립표준기술원(NIST)의 사이버보안 담당 고위 직원들 다수가 퇴직한 것으로 알려진다. CISA의 위협 탐지 및 선거보호 담당자부터 국가안보국(NSA)과 사이버 사령부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인재들이 해고되었다. 국토안보부에서 지금까지 약 400개의 직책이 감축되었으며, CISA 전체 인력의 3분의 1 이상인 1,300개의 일자리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와 언론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강화되는 양상 속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인력과 예산 감축 이외에도 동맹과의 정보협력에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온 국제기구, 동맹, 규범이라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근간이 흔들리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사이버안보의 접근 또한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국 사이버 사령부에 러시아에 대한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과 정보작전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캐나다를 파이브 아이즈에서 추방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한 바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제공을 둘러싼 내부균열이 부각된 바 있다. 일부 미국 동맹국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러시아에 대한 유화적인 접근 방식에 대응하여 워싱턴과 공유하는 정보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중국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의해 정보동맹과 신뢰를 취약하게 하는 근본적 도전들이 제기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종 시진핑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언급하고, "중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직 참모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중국 정책에 큰 변화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 국무부나 국방부와의 논의 없이 제안된 트럼프의 가자 소유 제안이 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대통령 개인의 대중국 정책의 불확실성이 미중관계는 물론 사이버 안보 전략과 글로벌 협력에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2. 미중 경쟁승리("Winning the Race")와 사이버 안보전략 : '전략적 디커플링'과 '힘을 위한 평화'를 목표로 한 사이버 안보

앞서 살펴본 다양한 혼란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임기 초반의 혼란은 대중국 압박과 승리라는 핵심 전략 목표를 중심으로 수렴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스스로 중국을 실존적 위협으로 공언한 적은 없으나 외교정책 참모그룹은 중국을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국가안보전략의 최상위로 설정하고 있다. 트럼프 1기 참모들은 대부분 중국이 전략적 경쟁자가 아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2기 경제,무역정책의 유력인사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 대표는 저서 「No Trade is Free」에서 중국을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이라고 규정하고, 국방 등 제조를 적대국에 의존하는 것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강조한다. 국방부 차관인 엘브리지 콜비는 중국과의 대결을 국가안보 의제에서 가장 높은 우선 순위로 끌어올릴 것이 확실하며 유럽에 대한 미국의 공약, 특히 우크라이나 방어에는 초점을 덜 맞출 가능성이 높다. 헤리티지 연구소의 정권인수보고서 또한 중국을 미국에 대한 전체주의 적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의 보고서도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바로 보는 것을 주요한 정책적 우선순위로 강조하고 있다.[1)]

트럼프 2기에 포진된 외교안보 인사들 또한 중국을 이겨야 하는 상대로 규정하는 강경론자들이 다수이다. 국무장관인 마르코 루비오는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을 "이 나라가 직면한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경쟁자"라고 언급한 바 있고, 2024년 9월, '중국제조 2025"에 대해 "다음 10년 동안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앞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만의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클월츠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2024년 10월 회고록에서 "자신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미국인들에게 중국이 우리 삶의 방식에 가하는 실존적 위협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 시기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로 중국과 러시아를 권위주의 축으로, 동맹 등 유사입장국들과의 협력을 핵심 축으로 구분짓던 가치규범 기반의 사이버 안보외교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허위정보 대응, 해외영향력 공작 대응을 사이버안보기관의 정치화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선전, 허위정보공작 등과 관련된 기관과 예산은 폐지 혹은 축소되고 있다. 국무부의 해외정보조작 및 개입대응 허브(The Counter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Interference, R/FIMI)는 4월에 공식폐지되었다. 바이든 정부에서 글로벌관여센터(Global Engagement Center, GEC)로 허위정보대응과 글로벌 메시지 협력을 담당했던 본 기관에 대해 루비오 국무부장관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의회의 일부의원들은 GEC 추산 중국과 러시아가 해외영향력 선전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는 상황에서 이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이 환영할 것이라며 R/FIMI 폐쇄를 비판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 CISA의 예산과 규모 감축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이념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경제와 국토안보, 군사력을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한다는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 트럼프 2기 대중국 외교 정책 전망 관련 내용은 차정미, "트럼프 2.0 시대, 미중관계와 국제질서의 미래," 국회미래연구원 국가전략인사이트 101호 (2024.07)를 참조.

트럼프 2기 사이버 안보는 **미중경쟁에서의 승리(winning the race)를 최우선으로 하여, 첨단기술우위와 국토방위, 군사력 증강이라는 '힘을 위한 평화' '전략적 디커플링'이라는 대중국 기조 하에서 역량구축과 기술혁신, 대중국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1월 인준 청문회에서 존 랫클리프(John Ratcliffe) CIA 국장은 중국이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도전"이라고 강조하고, 개버드(Tulsi Gabbard)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중국은 우리의 가장 유능한 전략적 경쟁자"라는 정보기관의 평가를 언급했다. 랫클리프는 3월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중국이 군사, 기술, 경제 측면에서 미국에 "가장 위협적인 전략적 경쟁자"라고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의 CIA 단기 우선순위 목록에서 중국은 가장 상단에 있다고 명시했다. 역사상 그 어떤 적대국보다 중국공산당은 더욱 위협적이고 전략적으로 더 능력 있는 경쟁자라며, 경제, 군사, 기술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 모든 영역에서 미국을 이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번스 CIA국장은 중국 관련 예산을 3배 증액하여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랫클리프는 트럼프 1기 DNI 국장으로서 중국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 바 있으며, 트럼프 정부의 효율화 정책으로 예산과 규모가 감축되는 환경 속에서 미국 정보기구의 향후 조직개편과 전략방향이 대중국 대응을 중점으로 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2기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 담당 선임국장 불라젤(Alexei Bulazel)은 공격적 사이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외국의 사이버 침략에 대해 공격적으로 대응하거나 전통적 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격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해킹 작전으로 여러 미국 통신회사가 침해당하고 이들이 미국의 핵심인프라를 공격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대응으로 이들에게 더 높은 비용과 결과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라젤은 "이전의 행정부는 이런 대응에 매우 조심스러웠으나 공격적 사이버 전략의 플레이북을 새롭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설명하고, "재능과 역량을 갖고 있는 만큼, 지금껏 억제되었던 사람들의 능력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의 방어적 접근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으나, 인공지능 및 기타 첨단기술의 등장에 따라 현대의 위협 환경에 맞춰 방어를 바라보는 방식을 갱신할 것이라고 밝히고 "공격의 갱신, 방어의 갱신(Updating offense, updating defense) 이 두 가지가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사이버 안보 전략의 가장 큰 변화는 '인지전 인프라(예: 허위 정보, 가짜 뉴스)'를 사이버 보안 영역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기술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통제와 대응에 집중되고, 러시아는 사이버 위협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전반적인 지정학적 변화와 일치한다. 트럼프 2기의 사이버 안보전략은 미중경쟁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전략적 이동이 명료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전략적 디커플링"과 "Disconnected(네트워크 단절)", 사이버 안보에의 영향

트럼프 2기 대중국 정책의 핵심과제는 대중국 첨단기술 우위의 유지와 리더십 유지에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트럼프 2기 인사들은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와 분리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 트럼프 1기 참모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중국 정부를 치명적 적이라고 규정하고, "전략적 디커플링(strategic decoupling)"을 목표로 중국경제와의 더 큰 단절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투자 축소, 기술 상호의존 중단을 제기한 있다. 인공지능과 같은 민감기술을 다루는 미국의 첨단기술기업들이 생산의 필요와 연구개발 필요 때문에 중국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중용도 기술로 중국 군사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새로운 수단들을 만들어 강력한 수출통제정책 도입을 지속하여 미중간 기술 상호의존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취임 당일인 1.20일 발표된 '미국우선 무역정책'은 미국 산업과 제조 기반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국가의 기술우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현재의 수출통제-특히 전략물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술이 전략적 경쟁자에게 이전되지 않도록-의 허점을 제거하는 등 경제안보 조치에 대한 제언을 제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상무부가 커넥티드카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서비스국(ICTS)의 규제 제정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고 이 통제가 커넥티드카 이외에도 다른 커넥티드 상품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2기의 전략적 디커플링은 첨단기술 분야의 봉쇄 뿐만 아니라 사이버, 인터넷 공간의 분리를 주요한 요소로 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안보 시대 데이터, 네트워크, 플랫폼의 공유가 국가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중국 네트워크 인프라, 중국 플랫폼, 중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와 이들이 미국 데이터에 접근하고 수집하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적 기술적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2기 사이버 안보전략은 대중국 기술우위와 경제안보 전략 차원의 커넥티드 상품, 소트프웨어 제한 등 산업안보 조치와 밀접히 연계되면서 사이버 안보를 위한 첨단기술통제 조치와 첨단기술통제를 위한 사이버 안보조치를 상호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실천적 조치들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와 사이버 안보에의 영향

트럼프 2기 국방전략 또한 대중국 대비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중국과의 대치에 집중하고 있다. 트럼프 1기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밀러(Christoper Miller)는

헤리티지 보고서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중대한 위협은 중국"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력은 전력계획부터 고용, 배치까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중국의 대만공격을 억지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른 지역의 동시 전쟁에 전력자산을 투입하기 전에 중국의 대만 침략을 패배시키는데 전통적 전력 계획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국방전략 또한 중국과의 경쟁에 전력집중을 극대화하면서 드론 등 첨단기술 전력과 핵무기 등 전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군사력 경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3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내부 지침 메모(internal guidance memo)'에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중국의 대만 점령을 억제하고 본토 방위를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도록" 미군의 방향을 재조정했다. 이는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내용과 거의 동일한 일부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군사력 재배치와 함께 중국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 군사혁신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라운드의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맷 포틴저는 국방비를 냉전 시대 수준으로 증가시킬 것을 강조했다. 실제 트럼프 2기 국방비는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2026년 예산요청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막대한 예산삭감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이 국방비에 투자된다는 것이다. 2026년도 국방비는 1133억달러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13% 증액되었다. 증가의 주요한 배경과 우선적 중점투자 분야는 국경방위와 같은 본토 안보와 함께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침략 억제로 제시되었다.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군비지출 또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2기 국방부의 사이버정책 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서튼(Katie Sutton)은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의 사이버 위협 억제전략 강화를 약속했다. 적대세력의 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공격적 사이버안보조치를 강화하고 AI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이버 안보전략 또한 대중국 최대압박, 군비경쟁, 인태지역 최우선이라는 군사전략적 기조를 반영하게 되면서 사이버 안보전력 강화, 대중국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동맹 확대 대신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국가들 간의 임시적 혹은 준공식적 정보 확대를 선호한다고 밝히고 있다. 향후 인태지역에서의 사이버 안보역량강화를 위해 일본, 필리핀, 한국 등 대중국 대응 차원의 정보협력, 사이버안보 협력을 위한 느슨한 형태의 안보협력구조가 구체화될 수 있다.

5. 결론 : Winning the race and Cyberwarfare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전략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바이든

정부 시기 허위정보와 해외영향력공작 등의 어젠다가 사라지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격적 수단을 포함한 군사적 경제적 억지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 전략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는 중국과의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혁신과 안보의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유사 입장국 연대, 가치외교 등 소프트파워와 동맹 중심의 사이버 안보 정책기조는 상대적으로 후퇴하면서 국토방위, 역량강화(기술패권우위), 인도태평양 군사우위의 목표를 중심으로 '힘을 위한 평화, 힘을 통한 패권'의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전략적 디커플링, 힘을 통한 평화의 기조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와 충돌하면서 미국 스스로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훼손할 수 있는 모순적 환경에 있다. 해외영향력 공작과 허위정보 대응 등 글로벌협력이 약화되고, CISA 등의 조직재편과 예산 감축 등의 변화, 파이브아이즈 등 정보동맹의 변화 등 속에서 의회는 물론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이버 안보 역량의 약화, 중국 등 위협국가들의 공세 등 다양한 측면의 위험들이 확대될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불확실성과 행정부 내 전통적 엘리트 전문가, 그리고 미국우선주의 충성파들간의 갈등과 정책불일치의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트럼프 2기의 불확실성과 혼란은 사이버 안보전략에의 불확실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중 경쟁에서의 승리라는 큰 틀에서 사이버 안보전략은 경제적 우위와 군사적 우위 추구를 목표로 역량과 협력, 활동의 강화로 수렴되어 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 초반의 혼란과 혼선이 향후 미국의 대중국 승리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수렴되면서, **큰 틀에서 예상가능한 트럼프 2기 사이버 안보전략의 이동은 1) 중국에 집중하면서 러시아 등의 사이버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2) 기술적 물리적 인프라에 집중하면서 허위정보 영향력 공작 등 정치적 대응은 약화되고, 3) 국토방위와 군사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사이버 안보의 군사화 추세가 강화되고, 4) 미중 첨단기술 경쟁에서의 우위를 위한 기술통제 목적의 사이버 안보 담론과 대응이 강화되고, 5) 대중국 대응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인태지역 국가들과 미국중심의 양자 소다자 정보협력, 사이버 안보협력이 확대되고, 6)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공세적 대응이 강화되고, 7) 경제적 이익과 국토방위, 군사적 대비와 군사활동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미중간 사이버 공간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사이버안보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